東洋學 第66輯(2017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일제의 만몽정책에 대한 한중의 인식비교

梁 志 善*

❙국문초록❙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대중불간섭노선을 비판하며 만몽지역에서의 특수 이익 유지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각은 공통적인 면도 있었으나, 인식의 방법과 심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주 한인들은 만몽개척이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던 경제조건의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주행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세력들은 만몽정책이 가지는 침략적 속성을 파악하고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중국침략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중국인들 역시 산동출병과 제남사건 등을 통해 만몽정책의 침략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관내지역 한인들과 연대해 일본에 대항하려 했다. 그러나 한인들이 이주해 생활하던 만몽지역에서는 한인들을 일본 만몽침략의 선구자로 인식하였다. 토지상조권을 두고 한인들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났고, 침략발판을 마련하려던 일본이 조직적 개입을 시도하면서 한인의 이주를 만몽침략정책과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는 한인에 대한 구축사건으로 표출되었고, 한인구축소식이 국내에 악의적으로 선전되면서 전국적인 화교 구축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일본이 추진한 대중침략정책에 대한 한중 간 인식 차이는 매우 컸다. 인식 차에서 발생한 여러 마찰과 모순들이 한중 양국 간 불신을 초래해 연대관계 형성을 저해하였다.

[주제어] 만주, 만몽정책, 한인이주정책, 다나카 기이치, 한인구축

❙목　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만몽정책 추진
Ⅲ. 한국의 만몽정책 인식
Ⅳ. 중국의 만몽정책 인식
Ⅴ. 맺음말

*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硏究專擔助敎授 / liangzhishan@naver.com

Ⅰ. 머리말

20세기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滿蒙政策이 수립되었다. 만몽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田中義一이다. 1927년 새롭게 구성된 다나카 내각은 山東에의 군대파견, 濟南事件 등 만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력사용은 물론 한인들을 직접 침략에 이용하였다.

이 같은 만몽적극정책을 바라보는 한중 양국 간 시각은 달랐다. 중국인들은 만몽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본의 식민지인으로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던 한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고, 한인들 역시 만몽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對中 침략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한국에서는 만몽의 지역적 개념, 만몽이익권에 관한 일본의 관심과 그것에서 비롯된 정치・군사적 방침, 문학작품을 통해 본 만몽지역 이주 한인들의 삶 그리고 만몽을 바라보는 당시 국내 한인들의 시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중국에서 역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대이전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륙정책을 만몽정책으로 규정짓고 그에 따른 중일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2]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본이 추진한 만몽정책이 가지는 침략성을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한중관계에 있어 만몽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본 논문은

---

1) 申熙錫, 「滿蒙權益을 둘러싼 日・美關係의 相剋－對中國 21個條 要求의 始末」, 『한국정치학회보』 14, 한국정치학회, 1980; 신희석, 「日本의 大陸進出政策과 滿蒙權益」, 『일본연구논총』 2, 현대일본학회, 1981; 박선영, 「일본의 군사 비밀 지도와 만주: 만몽지역 공중측량 지도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64, 한국중국학회, 2011; 채수도, 「오가와 슈메이의 ‘만몽구상’에 대한 고찰 : 안보・경제논리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硏究』 52,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梁志善, 「한인의 동부내몽골 이주를 통해 본 일제의 滿蒙政策(1931~1945)」, 『몽골학』, 한국몽골학회, 2014; 柳水晶, 「고레이〈朝鮮人(コレイ) 이야기〉의 전략－장혁주의 「빙해」(氷解)와 〈조선인 만몽개척 청소년의용군〉」, 韓國日本學聯合會 第5回 學術大會 및 韓國日本語文學會 第25回 學術大會, 2007; 홍순애, 「만주기행문에 재현된 만주표상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간극－1920년대와 만주사변 전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7, 국제어문학회, 2013; 安志那, 「만몽청소년의용군과 르포르타주 문학－칸노 마사오(菅野正男) 『흙과 싸우다(土と戦ふ, 1940)』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91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5: 高柄翊, 「外國에 대한 李朝 韓國人의 觀念」, 『白山學報』 8, 백산학회, 1970; 全成坤, 「五族協和”와 “民族이데올로기” 사이에서－滿州 「建國大學」과 崔南善의 「滿蒙論」을 中心으로」, 『만주연구』 4, 만주학회, 2006; 오미영, 류병재, 「李軫鎬의 『滿蒙の旅』에 나타난 동부 내몽골」, 『몽골학』 42, 한국몽골학회, 2015; 나카미 다츠오, 「地域槪念의 政治性」, 『만주연구』 9, 만주학회, 2009.

2) 중국에서는 일본 대륙침략정책의 용어로서 만몽정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만몽정책의 연원을 막부 말기 이본의 海外雄飛論과 洋夷論에서 찾기도 한다(易顯石, 「試論日本“滿蒙政策”的形成與性質」, 『日本硏究』 4, 遼寧大學日本硏究所, 1986). 대체적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대륙진출정책을 만몽정책이라 정의내린 후 그 변화과정과 특징들을 주로 연구하였다(沈予, 『日本大陸政策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金海, 「從地理概念看日本“滿蒙政策”的演變及其實質」, 『內蒙古大學學報 : 哲學社會科學版』, 內蒙古大學, 1997; 邢麗雅, 「“九・一八”事變前後日本對“滿蒙政策”的演變」, 『史學集刊』, 吉林大學, 1999; 朱洪兵, 「日本“滿蒙政策”的演變分析」, 『唐山師範學院學報』 34: 1, 唐山師範學院, 2012). 1907년부터 1916년 일본과 러시아가 러일전쟁 후 중국동북과 동부내몽골에서 획득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체결했던 네 차례의 러일밀약을 통해 만몽지역에서의 세력을 각각 분할하였고,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만몽정책을 수립했다는 분석도 있다(丁曉傑・李永福, 「四次日俄協定與日本在“滿蒙”的侵略擴張」, 『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 18: 10, 山西高等學校, 2006; 蔡鳳林, 「日俄4次密約－近代日本‘滿蒙’政策硏究之一」,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8). 이 같은 연구들을 통해 침략목표의 확정성과 불가변성, 침략수단의 군사성과 강점성, 침략과정의 장기성과 지속성을 만몽정책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薛子奇・於春梅, 「近代日本滿蒙政策的演變」, 『北方論叢』, 哈爾濱師範大學, 2003).

만몽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한중이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것이 한중관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력을 동반한 가장 적극적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인을 직접 개입시킨 다나카 기이치 내각 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몽정책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한반도 및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과정을 이해하고, 일본 대륙침략정책의 실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제는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사 측면에서도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일본의 만몽정책 추진

일본이 대륙확장정책을 추진한 것은 근대 이전부터였지만, 만몽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륙정책이 수립된 것은 만주에서의 이익을 놓고 벌인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였다. 1912년 7월 일본은 러시아와 내몽골에서의 세력범위를 결정짓는 제3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협상으로 동경 116도 27분을 기준으로 내몽골의 동쪽은 일본, 서쪽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확정지었다. 대체로 이때부터 새로운 지역개념으로서의 ‘만몽’이 등장하였다. 즉 만몽은 러시아로부터 승인 받은 중국 내 일본의 세력범위인 남만주와 동부 내몽골을 뜻하였다.[3)]

만몽정책의 내용과 범위 등은 일본의 중국 내 이익범위와 정책기조에 따라 계속 변화하였다. 1917년 일본이 러시아혁명으로 북만주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만몽의 범위는 한층 더 확장되었다. 일본이 지원하던 張作霖이 東三省 대부분을 차지한 후에는 만주 전 지역과 동부 내몽골을 세력권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결국 만몽정책은 일본이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한 후 관내로 진출하기 전까지 만몽지역에서의 이익권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견지했던 정치적 방향성을 나타냈다.

일본의 만몽정책 추진 양상은 정권별로 차이를 보였다. 1927년 봄, 경제 대공황의 여파 속에 속출하던 일본 국내 은행의 파산과 함께 중국 내에서 불어 닥친 민족주의의 발현은 급기야 일본의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졌다. 다나카 내각은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장하던 야당 政友會를 배경으로 출범한 정권으로, 정우회는 1900년 일본에서 결성된 보수 정당인 立憲政友會의 약칭이다. 당시 일본 내 군벌・청년 및 원로들은 외교와 재정상의 실패를 정부의 소극적 외교자세 때문이라고 비판하였고,[4)] 이러한 여론은 강경한 외교정책을 주장하던 정우회에 힘을 실어 주어 다나카 내각의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 다나카 기이치는 1927년 4월 20일 내각구성의 명을 받고, 4월 22일 若槻 禮次郎의 뒤를 이어 수상으로 취임한 뒤 신내각을 구성하였다.[5)]

다나카 수상은 조각 직후 와카츠키 레지로 내각의 對華 불간섭 방침을 철회하였다. 그는 취임 이틀 후 시정방침 연설회에서 일본과 遠東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는 바로 중국의 國勢”[6)]

3) 나카미 다츠오, 「地域概念의 政治性」, 『만주연구』 9, 194~195쪽.
4) 崔楝, 『滿蒙問題』, 發行處不明, 1932, 310~311쪽.
5) 「東方會議に關する件」, 1927년 6월 6일자(일본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6) 田中義一傳記刊行會編, 『田中義一傳』 下卷, 原書房, 1982, 570쪽.

라고 밝히며 대륙진출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연약외교 즉 중국과의 평화적 해결 혹은 기타 열강에 대한 협조주의로는 중국 내에서 일본의 권익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당시 일본이 열강으로부터 대륙 내 특수권을 제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을 배경으로 한 정책만이 만몽권익 수호의 유일한 방안임을 내세웠다. 또 그는 만몽에서의 권익 수호를 위해 중국 내 군벌할거 정세를 십분 활용하였다. 중국이 南京政府와 北京政府 등 여러 군벌정부로 나뉘어져 있음에 주목하고, 친일정권을 원조함으로써 일본의 권익을 유지・발전시키려 했다. 아직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일정권을 대리로 내세움으로써 이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인구증가 및 식량부족과 같은 일본 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정책 추진은 더욱 적극화 되었다. 1920년대 들어 일본의 인구는 매년 75만 명씩 증가하여 1924년 약 59,736,822명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곧 1억 명을 돌파해 중국・러시아・미국・독일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23년 일본의 경제 소득은 일인당 1,731圓 정도에 불과했다. 1925년 당시 미국의 1인당 6,670圓과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인구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과 낮은 경지면적률이 일본 내 식량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지만 일본정부는 마땅한 개선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만몽개발이 인구와 식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만몽이주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7)]

다나카 내각의 방침에 일본군부 역시 동의하면서 만몽침략정책은 가시화 되었다. 관동군사령부는 〈對滿蒙政策에 關한 意見書〉를 작성해 육군차관과 참모차장에게 송부하였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만몽정책 추진의 필요성, 東3省의 자치 추진, 친일 대리정권의 수립과 이권 확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군부는 장래를 좌우할 인구 및 식량문제를 해외진출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외진출의 중심지를 만몽 및 시베리아 방면으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중국에 진출해 있던 서양 열강들을 의식해 그들과의 공동관리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만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만일 만몽에서 일본의 특수권이 침해 받을 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의 일관된 대소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들은 이미 신해혁명 직후부터 만몽지역의 분리와 영유권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8)] 이처럼 만몽으로의 이주정책은 만몽진출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자치권 확보까지를 고려해 추진되었다.[9)]

기본구상을 마친 내각과 군부는 정식 회의를 열어 세부방침을 논의하였다. 1927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東京에서 東方會議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수상 다나카 기이치 위원장과 外務省・在外公館・식민지 육해군 수뇌부・대장성 인사들이 참석하였다.[10)] 본회의의 의제는 '對支政策根本方針'으로, 이와 관련된 만몽

7) 藤岡啓,『滿蒙を新らしく見よ』, 外交時報社, 1928, 2~4쪽.
8) 佐藤元英,『昭和初期對中國政策の研究』, 369쪽.
9) 關東軍司令部,「對滿蒙政策ニ關スル意見」, 1927년 6월 1일자(일본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10) 1927년 북벌 개시와 함께 일본이 산동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6월 16일 개최가 어려워졌다. 또한 다나카총리의 병세가 심각하여, 6월 27일로 회의가 연기되었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森恪外務政務次官, 出淵勝次外務事務次官, 植原悅二郎外務參與官, 木村銳市外務省亞細亞局長, 齊藤良衛同通商局長, 堀田正昭同歐美局長, 芳澤謙吉駐華公使, 吉田茂在奉天總領事, 高尾享在漢口總領事, 矢田七太郎在上海總領事, 兒玉秀雄關東長官, 武藤信義關東軍司令官, 淺利三郎朝鮮總督府警務局長, 松井石根參謀本部第2部長, 富田勇太郎大藏省理財局長 等이다.

의 정치현안과 경제문제가 상정되었다. 부속의제로는 〈중일 현안 해결을 위한 撫血方에 관한 件〉이 올라왔다.[11] 다나카 수상은 정부와 군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몽정책을 국책으로 통과시켰다. 만몽정책의 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워싱턴회의에서 결정된 9국 조약 하에서 제한 받고 있던 만몽지역에 대한 일본의 특권 및 이익을 회복해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의 존립을 견고히 함으로써 일본의 국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안건으로 〈滿蒙에서의 鐵道問題에 관한 件〉, 〈滿蒙에서 土地 및 本溪鑛山問題에 관한 件〉, 〈東三省의 條約違反의 不法措置에 관한 件〉 등이 통과되었다.[12] 일본이 특수이익을 가지고 있는 두 지역을 개발해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고, 향후 상조권과 자치권을 획득함으로써 완전히 일본의 세력권 하에 두겠다는 다나카 수상의 구상이 구체화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정부는 만몽의 평화를 유지하며, 영구히 내외국인의 이주할 땅을 만들기 위하여 산업의 개발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
2. 만몽에 대한 일본의 지리적, 역사적 우월한 지위를 어떤 자이건 간에 침범함을 불허한다. 만일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일본은 단연히 무력으로써 물리친다.
3. 중국에 견실한 만몽정부가 성립되기까지 일본은 각 지방권력을 상대로 하여, 개개의 문제를 해결하며, 武漢방면에서는 무한정부, 상해와 남경방면에서는 남경정부, 동삼성 방면에서는 張作霖 정부와 교섭한다.
4. 만몽정책의 성공을 위해 장작림을 대표로 하여 상조권을 비롯한 기타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섭을 개시한다.
5. 만몽정책 실시를 위해 각 기관은 종래보다 더욱 견고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상조권 확보를 목표로 작업에 착수하며, 장작림과 교섭해 동삼성에 대한 치외법권 철폐와 함께 중국 측으로 하여금 內地 雜居를 허락케 함으로써 일본인이 중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을 모든 문제 해결의 주요한 조건으로 한다.[13]

회의 후 다나카 수상은 만몽정책의 시행 및 운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을 외무대신에게 일임해 추진하도록 하고, 상조권 등의 문제는 중국 사정에 밝은 日本在支公使 및 奉天總領事에게 맡겨 적당한 기회에 장작림정부와 교섭하도록 했다. 7월 20일, 위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된 〈滿蒙諸懸案解決方〉은 일본재지공사와 외무성 등을 통해 장작림정부에 전달되었다. 이것은 중국 측에 대한 최후통첩과 같은 것으로 만몽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南滿鐵道를 통과하는 동삼성 측 군사수송 거절, 奉天兵工廠에 대한 모든 재료의 공급 금지, 京奉線 군용열차의 만철부속지 통과 금지'[14] 등의 조

11) 「東方會議に關する件」, 1927년 6월 3일자(일본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12) 「田中內閣滿蒙積極政策上奏文關係」는 일본 外務省外交史料館에 소장 중이나,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田中奏折'이라고도 불리며, 동방회의 당시 천황에게 올려졌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진위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1930년대 다나카주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中國國民党浙江省杭縣第二區第二分部編輯, 『揭穿日本侵略中國滿蒙的密謀』, 中國國民党浙江省杭州縣第二區第二分部, 1931' 같은 서적들이 출판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중국 측 자료에 따랐다.
13) 「滿蒙懸案解決手段ニ關スル件」, 1927년 8월 3일자(일본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14) 위와 같음.

치로 장작림을 압박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일본이 만몽에서 자치권을 획득하는데 협조하도록 했다.

다나카 내각의 만몽정책은 일본인 이민장려 · 산아제한 · 경작지확보 세 가지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 가운데 일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이주정책이다. 매년 山東人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중국인이 만몽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했다. 다나카 수상은 이들이 일본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로 인해 이 지역 80만 명의 일본인이 無處의 지경에 놓일 수 있으며, 계획했던 식량조절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정부는 만일 중국인이 만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된다면 5년 후에는 대략 60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중국인이 정치적 · 경제적 기득권을 선점한다면 일본이 만몽에서 영유권을 선점하고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이에 다나카 내각은 일본인을 만몽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삼았다.

일본인 이주는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일본인들 대부분 생활환경의 차이가 커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나카 수상은 식민지인인 한인들을 일본인 대신 만몽지역으로 이주시켜 수전을 개발하도록 하고, 일본인들은 조선으로 이주시키기로 했다.[15] 한인들을 이용해 상조권을 획득하면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하고, 일본 국내의 인구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식민지인이던 한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언제든 만몽지역으로의 일본군 파견과 주둔까지 가능해 이 지역의 자치권 획득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16]

그러나 이주정책이 완료되기 전 북벌이 시작되면서 다나카 내각의 만몽정책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북벌 이후 중국 내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날로 높아졌다. 중국이 통일될 경우 만몽에서의 특수권을 보장받아 현안들을 해결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였다. 다나카 수상은 즉각적으로 무력사용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북벌을 저지하기 위한 군대 파견을 결정하였다. 5월 28일 새벽 다나카 수상은 鈴木參謀總長과 함께 직접 일왕에게 중국의 시국에 대한 근황을 보고한 뒤 군대 파견에 대한 재가를 받았다.

다나카 내각은 군대 파견의 명목으로 일본교민보호를 내세웠다. "최근 南京 · 漢口 및 기타 각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중국 당국이 兵亂 시에 교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었고, 당시 교민들이 심각한 위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華北 동란이 임박한 지금, 다시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며, 濟南의 2천 日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병은 일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 남북 양군의 군사행동과는 무관하며, 일본은 오직 중국 大局이 일찍 안정을 되찾아 일군이 조속히 철병하기를 희망한다"[17]고 군대 파견과 일본의 중국 진출이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였다. 그러나 곧 일본의 만주주둔군 제10사단이 大連을 경유해 青島와 제남으로 출발함으로써 그것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15) 東洋協會 編,『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東洋協會, 1927, 15쪽.
16) 中國老年歷史研究會 編,『日本侵略我滿蒙供狀』, 中國老年歷史研究會, 1985, 43쪽.
17)『申報』, 1927년 5월 28일,「日本下令出兵山東」.

Ⅲ. 한국의 만몽정책 인식

만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본인을 대신한 한인들의 이주가 추진되었다. 이는 식민지 수탈경제 체제 하에서 신음하던 한인들에게 신개척지와 생활방도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 국내 인구 및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산미증식계획 속에서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른 상태였다. 일본의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일본에 비해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은 삶의 터전을 잃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만몽으로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였고, 한인들은 이주행렬에 동참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몰락한 자작농과 소작농들이 점차 토지로부터 이탈되어 만몽을 향하게 되었다.[18]

이주행렬에 자의 혹은 타의로 동참하던 한인 대부분 만몽정책이 가지는 침략성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였다. 만몽이주를 둘러싼 비난이 일자 이를 단순히 열강과 일본 간의 외교문제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다.[19]

한인들이 만몽정책의 침략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국내환경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일본은 만몽정책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침략성에 대한 반대 여론의 형성을 일찌감치 차단하고자 신내각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신문에 보도되는 만몽정책 관련 기사는 중국 측의 간단한 항의서 제출이나 이주경과 보고 정도에 그쳤다.[20] 동시에 일본은 중국 측 비난이 만몽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수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기사를 연일 게재하며,[21] 만몽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였다. 만몽정책의 침략성을 대내외에 알리려고 한 노력들도 일부 있었지만 일본이 이를 통제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1921년 '조선민중의 신문'을 자처하며 개혁을 단행한 『朝鮮日報』의 주필 安在鴻도 일본 군대파견을 중국에 대한 침략행위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피체되어 징역 5개월을 언도 받았다.[22] 제한된 정보로 인해 식민지 조선 내 일반 한인들이 일본의 대륙진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23] 이에 다나카 내각이 추진하고 있던 이주정책은 한인들에게 큰 반감 없이 수용되었고, 식민지 한인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침략정책을 집행하는 일본의 대리주체가 되고 말았다.

생활방도를 찾기 위해 이주에 동참했던 한인들의 의도와 달리 만몽지역의 중국인들은 만몽이주정책이 조선인을 내세운 일본의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생각했다. 중국 주민들과 관헌들은 이주 한인들을 일본제국주의의 주구 혹은 앞잡이로 보았고, 이는 한인에 대한 구축으로 이어졌다. 한인들 역시 자신들의 이주를 일본이 추진한 만몽정책과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중국인의 구축행위 자체에만 주목하였다. 구축현상이 확대되

18) 『東亞日報』, 1927년 2월 16일, 「日益激增하는 滿洲移住同胞」.
19) 『東亞日報』, 1927년 5월 23일, 「滿蒙에 對한 日露諒解意見, 軍部로부터 首相에 進言」; 『東亞日報』, 1927년 8월 4일, 「日本의 滿蒙策과 露國硬軟兩論」; 『東亞日報』, 1927년 9월 7일, 「露中滿蒙政策, 後藤新平子首相과 協議」.
20) 『東亞日報』, 1927년 6월 3일, 「〈日本山東出兵은 國際公法違反, 出兵中 勃發事件責任은 日本에〉 南京政府正式抗議」; 『東亞日報』, 1927년 6월 3일, 「方南代表 外務省을 訪問」; 『東亞日報』, 1927년 6월 8일, 「哈市官憲 對中態度一變, 日本의 山東出兵을 嘲笑」; 「武漢에 排日氣勢, 日本의 山東出兵으로」 『東亞日報』, 1927년 6월 10일, 「哈市官憲 對中態度一變, 日本의 山東出兵을 嘲笑」; 『東亞日報』, 1928년 4월 26일, 「哈市官憲 對中態度一變, 日本의 山東出兵을 嘲笑」.
21) 佐藤元英, 『昭和初期對中國政策の硏究』, 380쪽.
22) 『朝鮮日報』, 1928년 5월 26일, 「一審보다 四月加刑 禁錮八月判決 일심보다 사개월이 더해 朝鮮日報 安在鴻筆禍 言渡」.
23) 金恒圭, 「滿蒙獨立運動과 朝鮮人 利害, 滿蒙의 特殊性과 우리들」, 『三千里』 3: 11, 1931년 11월 1일.

면서 만몽정책은 그 본질을 떠나 이미 한인과 중국인 간의 민족갈등문제로 변질되어갔다. 한인들은 구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에 도움을 호소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만몽지역의 한인문제가 국내에도 알려졌다. 국내 한인들은 중국 내 한인에 대한 구축에 맞서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 상인 4명이 한인들의 보복으로 구타당하는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24]

그러나 일반한인들과 달리 독립운동세력들은 일찍부터 만몽정책의 침략성에 주목하였다. 1927년 북벌 재개 후 북벌군의 승리가 계속되자 일본은 중국의 통일을 저지하고 만몽에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5월 27일 산동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 사건을 직접 중국에서 목도한 독립운동세력들은 다나카 내각의 만몽정책에 강한 반감을 가졌다. "중국 측이 먼저 약탈을 일삼아 거류민 보호를 위해 산동출병을 결정했다"는 일본 측 선전에 대해 "일제가 무력을 사용해 일시에 중국 민중을 억압하고 살상한 것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침략행위"[25]라고 비난하는 등 만몽정책이 가지는 침략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각지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만몽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을 형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正義府는 청일전쟁 이후 요동반도에 대한 삼국간섭으로부터 21개조 체결까지를 모두 만몽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중국사회 내에서 조선인이 일본의 노예가 되어 만몽침략의 선봉대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한중연대를 제안하였다.[26]

한국독립당 역시 한중 피압박 민족의 연대로 함께 만몽정책을 극복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28년 3월 한국독립당 동3성 대표는 중국관리와 중국민들에게 急告한다고 밝힌 성명서에서 "다나카 내각의 만몽정책이 一步一步 만몽을 압박하는 교책을 사용하고, 한중 민족의 제휴를 방해하고 있으나, 양 민족의 교류가 오천여 년에 이른다......(중략) 목하 양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자의 약소민족에 대한 압박과 착취를 받는 상황에서도 서로 원조하고,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해 적을 타도하자"[27]며 양국의 오랜 우의를 강조하며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安昌浩는 일본군의 산동 파병으로 생겨난 중국 내 반제·반일 정서를 기회로 한중연대를 성사시켜 독립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일제 산동출병과 산동출병 시 자행한 중국인 참살 등을 근거로 한·중이 연합해 일본에 대항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족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또 "이제까지 합작과 관련된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합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 양 민족이 일치단결해 공동분투 해야 한다"[28]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직접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반일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李乙奎·李丁奎 등 아나키스트들은 제남참안의 소식을 듣고 그 즉시 南京으로 내려가 중국인 毛一波·陳光國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남경에서 제남참안이 일본에 의해 빚어진 것임을 폭로하는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일본물품의 불매와 배척을 선동하는 연설에 참여하면서 직접 중국인과의 연대투쟁에 앞장섰다.[29]

---

24) 藤岡啓, 『滿蒙を新らしく見よ』, 265쪽.
25) 『朝鮮日報』, 1928년 5월 9일, 「濟南事件의 壁上觀 田中內閣의 大冒險」.
26) 「滿鐵 附屬地에 居留하는 一般同胞에게」, 『移入輸入 不穩刊行物 槪況』, 1928년 4월 8일.
27) 「東三省 官公吏 및 民衆에게」, 『移入輸入 不穩刊行物 槪況』, 1928년 3월.
28) 『신한민보』, 1928년 7월 26일, 「安昌浩 先生 告中國 革命同志」.

중국 내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대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 만몽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벌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한인들이 黃捕軍官學校에 입교해 북벌에 가담하였다. 孫文이 군사역량을 기르기 위해 설립한 황포군관학교에는 북벌 당시 200명의 한인 청년들이 입학해 훈련을 받고 있었다. 1926년 7월 9일, 10만의 국민혁명군이 정식으로 북벌을 개시하자 이들 한인청년 대부분은 직접 장개석의 북벌군으로서 대일전에 참가하기에 이른다. 한인 청년들이 북벌에 직접 참여했던 것은 북벌을 중국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金山은 당시 한인청년들이 북벌군에 가담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불과 육개월 이내에 양자강 유역까지 도달한 북벌군의 승승장구하는 급진격이 한창이었을 때 모든 혁명가들이 느꼈던 환희와 열광은 지금은 기억해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화북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 우리의 가슴은 미칠 듯이 기뻐 날뛰었던 것이다! 전아시아의 자유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무기를 잡고 일어서려고 이천만 한국인이 국내에서 그리고 만주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중국인들에게 말하였던 것이다.[30]

한인 청년들은 북벌이 만몽정책을 앞세워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을 저지시켜 줄 것이므로 우리의 독립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중국혁명이 성취되면 우리에게도 막대한 이익 즉 독립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면 동양은 영원히 영・일 양국의 제국주의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31]

만몽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세력 역시 북벌이 만몽까지 확대 될 경우 직접 북벌에 참여해 일본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국혁명이 승리하면 고려혁명의 문은 열릴 것이며, 동양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생각해 북벌군이 만주로까지 진격해 오기를 기대하였다. 북벌군에 가담해 만몽정책을 철회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조선의 독립을 촉진시키려던 생각이었다. 朝鮮共産黨 滿洲總局은 북벌군이 북진하며 승승장구하자 1927년 1월 군사문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사운동에 관한 준비를 구체화 하였고,[32] 1928년에는 黑龍江省에 軍事課를 두고 군사지도자와 기본부대를 양성해 국민혁명군과 합류할 계획을 세웠다.[33]

그러나 북경정부가 일본의 지원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면서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몽 현지로 이주해 생활하던 대다수 한인들의 인식과 갈등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간극으로 한중 간 충돌은 계속 되었다.

1929년 일본 東亞勸業株式會社 소속의 봉천농장에 고용된 한인 농민들이 관개수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

29)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김성숙 장건상 정화암 이강훈의 독립투쟁－』, 민음사, 2005, 346쪽.
30) 님 웨일즈(저), 조우화(역), 『아리랑』, 동녘, 1984, 131쪽.
31) 『신한민보』, 1927년 6월 9일, 「동국혁명의 금일」.
32) 姜德相・梶村樹秀 編 「間島及び接壤地方共産主義の運動概況」,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1976, 495쪽(신주백, 『한국독립운동의 역사－1930년대 중국 관내지역 정당통일운동－』 4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3쪽 재인용).
33) 金俊燁・金昌順 共編, 「高麗共産青年會滿洲總局東滿道幹部會員檢擧顚末」, 『韓國共産主義運動史資料編』 II,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80, 267~268쪽.

도 인근 漢族농민들과 분쟁이 발생했고, 일본영사관이 한인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을 파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영사관은 조선인민회, 보민회, 선민부, 한교동향회 등 자위를 명목으로 한 친일단체 조직을 권장하고, 교육・의료・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인의 만몽지역 정착과 농지확보를 원조하였다.[34] 이후 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영사관 설치와 군대 파견까지 추진되었다. 이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인들을 일본의 침략선봉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한중 간 연대를 통한 반일세력의 형성을 저해하였다.

Ⅳ. 중국의 만몽정책 인식

중국의 만몽정책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정책 추진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전 내각에서 추진했던 대외정책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들어선 다나카 내각이었지만 조각 직후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이전 내각의 신중론을 유지하는 '대내외에 관한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35] "일본은 중국의 사태에 깊은 동정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원조를 하여 희망을 달성하고자 한다. 일본에게는 실제로 일정한 순서와 방법이 있고, 만일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난상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동시에 비중국민의 본의를 믿어주길 바란다"[36]며 중국 측의 다나카 내각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려 했다. 4월 21일 외교기자단과의 회견에서도 "정부는 정우회의 적극정책 방침대로 진행하겠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완급이 필요하며, 적극과 소극의 두 가지 정책으로써 문제의 필요성에 따라 극히 신중한 수단을 사용할 것"[37] 이라는 신중론을 강조하였다. 정우회 계통의 내각 출현에 자극을 받아 촉진된 야당의 주역인 憲政會・政友本黨・新政俱樂部와 더불어 서양 열강들이 다나카 내각의 대중방침 의도를 의심하며 이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각 초기에는 불간섭기조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38]

표면적으로는 외교노선상의 변화가 없었지만 다나카 내각의 신중론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기득권과 만몽에 대한 특수지위가 보장 받을 때만을 전제로 하였다. 만몽에서의 정치상 우월지위와 경제상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 외에 기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다나카 내각 초기의 신중론 표명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그가 내세운 만몽정책의 군사적 특징을 간과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언론은 "다나카 내각이 소극정책으로부터 적극정책으로 극변하는 것을 주의해야하고 불간섭내정주의의 원칙은 오늘의 일본에 여전히 필요하다"[39]며 무력적 성향의 만몽정책을 이 시기 대중정책의

34) 孫春日・劉玥, 「論日帝"滿蒙"政策制造民族隔閡的慣伎及其危害」, 『東疆學刊』 33: 4, 2016, 80~81쪽.
35) 『大公報』, 1927년 5월 1일, 「評論田中對華政策」.
36) 『申報』, 1927년 4월 23일, 「日相田中發表施政方針」.
37) 『申報』, 1927년 4월 22일, 「日本新內閣之外交政策」.
38) 『大公報』, 1927년 4월 24일, 「日本野黨擬反對新內閣」.
39) 『申報』, 1927년 4월 22일, 「日本新內閣之外交政策」.

특징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불간섭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다나카 내각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나카의 만몽정책은 경기 불황을 이유로 곧 본연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만몽적극정책을 발표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던 일본인 대신 생활수준이 낮으며 수전 기술이 뛰어난 식민지 조선의 한인들을 만몽지역으로 이주시킨다는 세부방침을 밝혔다.[40] 만몽정책의 발표로 다나카 내각의 불간섭기조에 대한 중국인들의 믿음은 깨지고 말았다. 한인의 만몽이주는 만몽에 제2의 조선을 만들고 만몽을 중국에서부터 독립시키려는 일본의 구실로 받아들여졌다.[41] 일본이 한인을 만몽으로 이주시켜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경제와 정치적 침략을 자행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한인들의 이주 지역에 일본경찰이 들어오고, 정부협상을 통해 한인 보호정책의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중국인들은 직접 "만몽은 중국의 영토이고, 일본은 간섭의 권리가 없다"[42]며 한인들의 만몽이주를 경계하고 나섰다. "인구와 식량문제는 만몽을 척식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일본이 해명했지만, 한인이주를 앞세운 만몽정책에 대한 반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만몽정책에 대한 불만은 한인에 대한 구축으로 표출되었다. 1927년 남만주지역에서는 거주권 박탈 94건, 경작권 박탈 17권, 불법징세 12건, 이주허가증 박탈 7건, 귀화 강요 42건, 교육 방해 6건 등이 발생하였다.[43] 구축현상은 치외법권 철폐를 계기로 만몽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44] 치외법권 철폐와 관련해 장개석이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인구와 식량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45]고 발표하자 중국인들은 더욱 분개하였다. 여론을 의식한 일본이 "일정한 희생이 따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치외법권 철폐를 수용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이 상조권문제 해결을 교환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46] 중국인들에게 한인구축의 명분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다.

한인에 대한 구축은 일반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관헌이 주도하는 정치적 구축으로까지 이어졌다. 만몽 각지에서는 이주한인에 대한 관방의 취체안이 연달아 발표되었다. 1929년 遼寧省에서도 이주한인들에 대한 취체조령이 만들어졌다. 일본이 이주한인들을 만몽침략의 선구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이유로 내세웠다. 만몽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을 압박하여 일본의 침략계획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것이다.[47] 취체안 발표와 함께 한인이 토지를 임대할 때에는 지주가 반드시 縣知事에 이 사실을 보고 하도록 하는 세부규정도 마련되었다. 한인의 이주와 정착을 막기 위함이었다. 한인들에게 토지를 임대할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으

---

40) 崔棟,『滿蒙問題：朝鮮問題を通して見たる』, 61~65쪽

41) 藍孕歐,『滿蒙問題講話』, 南京書店, 1932, 274~275쪽.

42)『南京中央日報』, 1930년 3월 27일,「日本的對滿蒙移民政策與韓人」.

43) 孫春日・劉玥,「論日帝"滿蒙"政策制造民族隔閡的慣伎及其危害」,『東疆學刊』33: 4, 82쪽.

44) 藤岡啓,『滿蒙を新らしく見よ』, 263쪽.

45)『東亞日報』, 1927년 7월 27일,「日本이 滿蒙을 植民地視 함은 參見－奉天要人의 感想」.

46) 예상대로 일본은 이미 한인들을 통해 만몽지역에서의 토지상조권 획득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 현지인과 한인이 주민 간에 마찰이 빈번히 발생해 왔고, 현지 중국인들의 배척으로 한인의 만몽이주와 정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속히 상조권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던 치외법권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치외법권을 철폐하는 대신 토지상조권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겠다는 의도였다(『東亞日報』, 1927년 8월 8일,「滿蒙의 治外法權 日本 近近 撤廢? 商租權 問題도 同時解決 計劃」).

47) 李勳求,『滿洲와 朝鮮人』, 崇實專門學校 經濟學研究室, 1932, 246쪽.

며, 만일 1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吉林大洋 6元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한인이 토지를 임대할 때에는 중국 상인이나 그 지방 거주 혹은 귀화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중국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 엄격한 이주와 임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미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강제 퇴거를 명령하였다. 新民縣 東二區에서는 1927년 10월 14일 한인대표 두 명을 소학교에 소집하도록 한 뒤 음력 10월 1일까지 모두 퇴거하도록 조치하였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가족과 함께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西安縣 安慈鎭區官 吳仁溝 역시 순경 3명을 파견해 각 지역 한인농민들에 대해 중국인의 보증으로써 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한인들이 이주해 있던 대부분의 현에서 대동소이하게 존재하였다.[48]

치외법권 철폐로 인한 한인구축 문제가 일본의 만몽개발과 기득권 보호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은 즉각 만몽의 중국인들을 비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인들이 개척의 공을 잊은 채 한인에 대해 점점 조직화 된 구축을 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三矢協定이나 치외법권 철폐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49] 그러나 상조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던 일본은 치외법권 철폐를 철회하지 않음은 물론 한인들을 계속해 만몽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인들이 일본 만몽침략의 선봉이라고 더욱 확신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天津・上海・廣東 등 주요 관내지역 중국인들의 만몽정책 인식은 다른 면모를 보였다. 일본의 강경한 군사행동에 대해 전국적인 항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종래의 친일파도 반일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중일 간 제 문제와 통상조약 개정교섭 등의 전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50]이라며 일본에 강력히 경고하였다. 나아가 공적 일본에게 침략 당한 아시아 피압박민족으로서 한인들과의 연대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한인들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마찰이 없었고, 한인들이 직접 중국혁명에 참여하는 등의 경험으로 한인들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생각하였다.[51] “일본이 그동안 중국에서 실시한 對支積極政策’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국주의자가 그 침략성을 감추고 예의를 갖춘 것”[52]으로, 이주 한인을 통한 상조권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중침략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피압박 민족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하며, 연대를 통해 일본의 중국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한인과의 연대를 내세웠다. 만몽정책을 중국대륙은 물론 아시아 전체를 침략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발로라고 인식하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중국으로 망명해 활동하던 한인과의 연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53]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은 한중연대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라를 빼앗긴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저항해 일어난 한국의 혁명운동은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과

48) 藤岡啓, 『滿蒙を新らしく見よ』, 258~260쪽.
49) 藤岡啓, 『滿蒙を新らしく見よ』, 265쪽.
50) 『東亞日報』, 1927년 8월 22일, 「日 對滿蒙 積極策에 北京政府 抗議? 中國側 一般空氣 險惡」.
51) 『中央日報』, 1929년 7월 3일, 「한인을 이용한 일본의 동삼성 침략계획」(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중국보도기사Ⅰ)』, 270쪽).
52) 『申報』, 1928년 8월 25일, 「全國反日會告商界同胞書」.
53) 『中央日報』, 1928년 6월 7일, 「新加坡華僑的反日運動」.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장 큰 적이 일본제국주의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이 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이 현재 일본제국주의와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에 한중 두 민족은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로 마땅히 연합해 공동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두 나라의 독립자유를 쟁취할 것을 제안하였다.[54]

그러나 한중연대의 추진은 국내화교구축사건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만몽지역에서의 한인 구축사건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한인들의 복수라는 미명 하에 화교를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가 하면 화교의 상점을 부수는 등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전북 익산에서는 마을주민 600여 명이 현지 화교들을 공격했고, 익산 부근에 거주하는 화교 450명도 공격을 당해 중국으로 피난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자 한국과의 연대를 주장하며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해 오던 관내지역의 중국인 단체조차 유감의 뜻을 전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55] 만몽지역과 달리 한인이주의 원인을 일본의 만몽침략을 위한 이주의 강압과 선전으로 보던 그들이지만,[56] 화교구축사건 이후 연대의 대상으로서 한인들과 함께 반일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였다.

Ⅴ. 맺음말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대중불간섭노선을 비판하며 만몽지역에서의 특수 이익 유지와 보호를 위한 침략정책을 추진하였다. 한인들은 만몽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인이주정책의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주행렬에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로써 식민지 한인들은 의도하지 않게 만몽정책의 선봉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인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1927년 중국에서 북벌이 재개되었다. 중국의 통일을 저지하고, 만몽에서의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 일본은 산동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 민족주의가 고조되었고, 만몽정책의 일환으로 이주한 한인에 대한 조직적 구축이 이루어지면서 양 민족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한인에 대한 중국의 구축 소식은 국내에까지 알려져 중국인에 대한 구타사건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구축의 원인인 만몽정책의 침략성 보다는 중국인의 구축행위 자체만을 악의적으로 선전하였다. 한인구축문제, 치외법권문제, 상조권문제를 둘러싼 만몽지역에서의 마찰에 대해 〈忍苦 數十年의 我權益, 中國官民侵害의 蹂躪, 朝鮮人에의 壓迫 185件〉 등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만몽지역의 특수권 보호를 내세워 군사행동의 정

54) 『民國日報』, 1930년 1월 14일, 「중・한양대 민족이 연합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중국보도기사Ⅰ)』, 293쪽).
55) 『廣州民國日報』, 1928년 1월 5일, 「한인의 화인배척사건에 대한 외교후원회의 항의」(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중국보도기사Ⅰ)』, 266쪽).
56) 『廣州民國日報』, 1926년 6월 14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동삼성 이민정책」(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중국보도기사Ⅰ)』, 191쪽).

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양 민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명분으로 관동군을 파견하고, 영사관을 설치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것이다. 이는 만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취체가 가능하게 함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통치안정과 만몽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안전한 확보로도 이어져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 매우 유리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해 활동하던 독립운동세력들은 만몽정책의 침략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중 피압박 민족 간의 연대로 이를 극복하려 했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자들은 직접 북벌에 참여해 일본과 맞서 싸웠으며, 정의부와 같은 독립운동 단체는 한중이 연합해 일본의 만몽침략정책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며 북벌군의 만주행을 기다렸다.

한편 중국은 다나카 내각 수립 초기 그의 강경한 태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취임 직후 그가 대중정책에 대한 신중론을 펴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 불간섭주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내 경기불황을 이유로 산동에의 군대파견·제남참안 등 일련의 대중정책들을 통해 다나카 내각의 침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남참안 이후 만몽정책을 아시아 전 민족에 대한 일본의 침략정책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중국인들은 이주한인을 이용한 만몽지역에서의 상조권 획득이라는 표면적 현상 대신 일본의 만몽정책이 가지는 침략성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공적 일본의 식민지인인 한인들과의 연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노력들이 만몽정책에서 비롯된 한중 간 갈등구조를 없애지는 못했다.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대상지인 만몽지역에서는 여전히 한인에 대한 구축의 형태로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한인 자체에 대한 불만 보다는 일본이 한인을 만몽침략의 선봉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그 화근을 없애려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만몽적극정책에 대한 한중 간 인식 차에서 발생한 모순과 마찰은 1920년대 한중 양 민족 간의 완전한 연대 형성을 방해하였으며, 결국 일본의 지속적인 대륙침략정책을 가능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東亞日報』『신한민보』『朝鮮日報』

『廣州 民國日報』『南京 中央日報』『大公報』『申報』『中央日報』

님 웨일즈(저), 조우화(역), 『아리랑』, 동녘, 1984.

沈予, 『日本大陸政策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蔡鳳林, 『日俄4次密約－近代日本'滿蒙'政策研究之一』,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8.

東洋協會編, 『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東洋協會, 1927.

保利史華, 『田中義一』, 東京 第一出版社, 1928.

藤岡啓, 『滿蒙を新らしく見よ』, 外交時報社, 1928.

崔棟, 『滿蒙問題』, 發行處不明, 1932.

田中義一傳記刊行會編,『田中義一傳』上下卷, 原書房, 1981.
국사편찬위원회 편,『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중국보도기사Ⅰ)』, 국사편찬위원회, 2005.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2일에 투고되어,
2016년 12월 16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2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2월 3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

Koreans' and Chinese's Understandings and Reactions Regarding the Japanese Empire's Manchuria-Mongolia Policies in 1920's

Yang, Jisun*

Although Koreans' perspective on the Japanese Empire's Manchuria-Mongolia policies and that of Chinese have something in common, there were som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methods and in depth between the two. Koreans monolithically understood the Manchuria-Mongolia policies within migration policies. While immigrated Koreans focused on economic potentials which they expected the Manchuria-Mongolia policies might derive, Chinese payed attention to the aggressive intention on the other side. Koreans in the core of migration policies were recognized as invasive tools. Through Shandong Expeditions and Jinan Incident, Koreans began to pay attention to and then realize the Japanese Empire's aggressiveness, and tried to overcome it with solidarity among oppressed peoples. Koreans attempted to accelerate their independence by defeating the Japanese Empire's aggressiveness in the Manchuria-Mongolia policies. Nonetheless, Chinese in the 3 Eastern Provinces perceived the aggressiveness of the Manchuria-Mongolia policies through immigrated Koreans, and the extrusion was continued.

[Key Words] Manchuria, Manmeng policy, Borderlands development project, Danaka Giichi, extrusion policies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